

**민주노총,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 2016년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와
노동운동 혁신의 쟁점들**

목 차

[서문]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01
[1] 민주노총 20년, 혁신의 전망	03
[2] 재벌체제에 맞서는 민주노총	07
[3] 필요한 것은 조직 형식이 아니라 운동	12
[4] 성찰과 반성, 혁신이 정치세력화 논의의 출발	16

[서문]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자

2016년 8월 22일, 민주노총 정책대의원대회가 진행된다. 창립 20년을 맞아 '한국사회 진보운동의 대표 조직'으로서 '조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도약을 요구'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 20년을 바라보는 노동운동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금 민주노총 혁신이 제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조합원의 구성, 조직 운영 원리는 물론이거니와 요구안의 구성, 교섭과 투쟁의 조직 등 모든 측면에서 민주노총의 계급대표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이라 자부하려면 정규직뿐만 아니라 임시·일용직 및 비정규직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사업장 단위의 교섭·투쟁을 넘어서서 지역별·업종별·산업별·직종별 교섭·투쟁을 통해 단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나아가 연대임금·연대고용을 실현해 나가는 동시에, 적극적인 조직화 사업과 공동요구·공동투쟁을 통해 노동시장과 산업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러지 못하고 있고, 이를 추진할 만한 진취적 계획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혁신 과제가 제기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이 20년 전 민주노총 출범 당시와 달라졌기 때문이다. 1995년 민주노총 출범에 이르는 과정에서 대다수 활동가들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성과를 제도화하고 합법화하는 것을 과제로 삼았고, 민주노총은 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장기침체로 드러난 구조적 위기에 봉착했다. 20년 전에는 높은 경제성장률이라는 전제하에 노동자의 몫과 공을 따졌지만, 지금은 만성화된 경제위기 속에서 손실의 책임과 위기의 타개책 놓고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다. 20년 전에는 노동조합의 정치·사회적 영향력을 토대로 부당해고 금지를 요구하며 고용안정을 논했지만, 지금 비정규직의 권리 확보와 고용승계가 고용안정의 주요 의제로 바뀌었다. 또 노동유연화 도입·저지 여부를 두고 싸우던 시절에서, 노동유연화의 확산을 막고 규제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변해왔다.

그리고 우리에게 던져진 매우 곤란한 질문이 있다. 오늘날 민주노조 운동은 재벌 대기업의 성장에 협조하고 그 과실을 나누기 위한 운동인가, 아니면 재벌체제의 그늘 아래 초과착취 당했던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이 구조의 변화를 추구하는 운동인가?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로서 재벌체제를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노총 운동 노선을 검토하고, 그 노선이 유지될 수 있는지 아닌지, 바뀌어야 한다면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따져야 한다.

또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재벌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대표기관으로 민주노총 혁신의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전략조직화 사업 방안, 산별노조-지역본부 조직혁신 방안, 정치세력화 방안, 2017년 전략투쟁 방안 등은 전반적인 민주노총 혁신 방향에 맞게 논의되어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산별노조 조직 범위를 둘러싼 다툼, 진보정당 운동의 실패와 분열, 또 그 속에 숨어 있는 수많은 정파 갈등까지 우리는 지금 수많은 갈등에 직면해있다. 민주노총 혁신이라는 화두를 움켜쥐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끈질기게 토론하면서 갈등을 혁신의 계기로 바꿔내야 노동자운동의 내일이 열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세력화방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 특정 정파가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갈등은 더욱 커지고 혁신을 위한 토론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를 덧붙인다. 2016년 정책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 혁신과 노동자운동의 전망을 끈질기게 고민하는 활동가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2016. 8. 22.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20년, 혁신의 전망

: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꿈을 키우자

1. 민주노총 운동 20년, 뼈아픈 귀적

노동조합 합법화, 높은 임금인상, 고용 보장, 병영적 노무관리 변화 등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역사적 성과는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무효화하려는 정권과 자본의 반격은 집요했다. 이들은 87년 대투쟁 이후 10년이 지나도록 민주노총의 합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정리해고제, 파견근로제, 변형근로제를 도입하려 했다. 1996~97 총파업 투쟁과 199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은 제3자 개입금지 삭제, 정치자금법 개정,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등의 성과를 얻고, 민주노총은 합법적 지위를 얻었다. 공무원·교사로까지 단결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다.

하지만 1997년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의 도입을 막지 못했고, 1998년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정리해고제 실시와 파견근로제 도입에 합의하고 다시 파기하는 혼란스러운 대응을 보였다. 결국 노동유연화의 추진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저항하지 못했다.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적 전망이 불분명해진 시점에서 노동조합운동은 합법적 지위를 얻는 데에 목표를 한정했던 것이다.

20년이 지난 지금, 민주노조운동 어떻게 변화했나? 합법적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조합원의 권리를 확대하고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제어하겠다는 민주노총의 구상은 성공하지 못했다. 정리해고제의 도입,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정리해고 저지 투쟁의 실패는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위축시켰다.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단결을 확대하고 노동시장 개입 수단을 확보하려는 계획 또한 좌초되었다. 결국 지역적 차원에서든 국가적 차원에서든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경로는 사라졌다.

공무원·교사로의 단결권 확대는 2000년대 초반 민주노총의 양적 확대에 일정하게 기여했지만 이내 반격에 직면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이 송두리째 부정당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그리고 1997년, 2011년 합의되지 못했던 마지막 쟁점인 복수노조 문제는 자본가가 교섭을 주도할 수 있는 형태로 제정됨으로써 노조 파괴의 무기로 변질되고 말았다.

노조 조직률은 10%선에 머문 지 오래고, 87년 세대라고 불리는 민주노조 운동의 주력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다. 근속 1년 미만인 초단기 근속자 비중이 30%를 웃돈 지가 10년이고, 실질임금 증가율은 생산성 증가율에도 못 미치고 있다.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사회개혁', '사회공공성 확대'는 언감생심이고,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력조차 크게 줄어들었다.

2.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을 위해

물론 뼈아픈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6~08년 한미 FTA 저지투쟁, 2013년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쉬운 해고를 위한 노동개약에 맞서는 투쟁 등에서 민주노총은 노동자와 시민들을 대표하여 한국사회의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사회운동의 주요 행위자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확인시켜준 바 있다.

임시·일용직에서의 노동조합은 불가능할 것이라 했지만, 건설노동자들은 지역의 노동시장을 통제하면서 스스로를 조직하고, 단체협약을 새로운 건설현장에 적용시키며 노동조합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존엄성 무시되는 현실에 놓여있던 청소노동자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방법을 찾았다. 정리해고, 손배청구, 직장폐쇄, 복수노조 등 노조파괴에 밀리고 밀리다, 단결된 투쟁으로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를 무력화시키면서 민주노조를 지켜낸 뜨거웠던 경험도 있었다. 학교별로 흩어져서 조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세간의 편견을 깨고 대규모로 학교비정규직 조직화에 성공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삼성의 무노조 신화를 깨고 민주노조를 건설했다.

이러한 경험이 값진 것은 우리가 단지 거리에서 ‘투쟁’을 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노총이 중요한 정세적 문제에 대해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해 투쟁을 벌이고, 이것이 사회적 인정을 받았다. 또 민주노총이 민중의 보편적 요구를 앞세워 정치·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나섰던 경험이다. 정규직·상용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임시·일용직에게까지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해가면서 노동조합운동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울 수 있는 계기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한다. 민주노조를 만들고 민주 집행부를 세웠다는 자부심, 한발 더 나아가서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의 자부심, 한국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을 노동자계급 전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한 혁신 전망을 세워야 한다. 정책대의원대회에서 우리는 이것을 본격적으로 토론해야 한다.

첫째, 공동의 요구와 공동의 투쟁

공동요구·공동투쟁은 노동자 내부의 단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다. 동일 사업장 내에서 뿐만 아니라, 동일 직종·업종에서 공동요구를 만들고 공동으로 투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요구·공동투쟁이다. 노조탄압, 노동시장정책, 법제도개선, 정치·사회 의제뿐만 아니라 시기집중 공동 임단투, 재벌·원청을 상대로 공동의 교섭권을 쟁취하기 위한 기획들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9월 27일 예정된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파업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돈벌이 경쟁 강화와 노동조합 약화를 위해 기획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강요하고,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에게까지 이를 도입하려고 한다. 이에 맞서 공공운수노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9월 27일 파업은 박근혜 정권에 맞선 하반기 투쟁의 중요한 고리가 될 것이다.

공동요구·공동투쟁을 좀 더 치밀하게 전개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정책대의원대회에

서 2017년 전략투쟁을 논의할 때, 어떤 전략적 기초 아래 전략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 먼저 토론되어야 한다. 재벌에 맞선 투쟁, 상시·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원청·재벌의 책임 강화, 노조 할 권리의 확대 방안에 대해 책임 있게 토론하고, 공동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총연맹과 산별노조·지역본부의 공동 전략이 없으면 2017년 전략투쟁은 공문구가 될 수 있다.

둘째, 정치·사회운동에의 참여

정치·사회운동의 주체로서 민주노총이 그 위상을 제고하려면, 법·제도 개선 투쟁을 실효성 있게 전개해야 한다. 의제와 요구의 나열이 아니라, 2017년 대선을 앞둔 시기에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 투쟁을 할 것인지 계획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간접고용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외주화·간접고용이야말로 노동자에 대한 초과착취를 실현하는 핵심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금은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을 통한 한반도 평화의 실현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이다. 이를 위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한·미·일 군사동맹의 강화, 미국의 핵우산 정책 확대, 북의 핵실험과 핵보유국선언 이후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민주노총이 전 조합원들과 함께 막아내야 할 중요한 과제다.

한편, 초국적 기업의 초과착취와 수탈에 제동을 걸고 국제노동표준을 높이기 위한 세계적 운동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은 초국적 기업의 수탈 대상인 동시에, 현대차·삼성전자와 같은 이 땅의 초국적 기업들이 세계를 대상으로 초과착취를 자행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국제노동표준을 확립하고 노동자들의 국제연대를 확대하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셋째, 노조 할 권리의 확대와 일상적인 조직화 사업

마지막으로 노조 할 권리를 확대해야 한다. 노조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가입 사업을 일상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변화된 노동시장에 걸맞은 활동을 벌여 나가야 한다. 다수의 노동자를 포괄할 때 계급대표성을 확립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아가 열악한 노동조건은 그 자체로 노동시장을 하향평준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노조 할 권리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노조 가입 사업은 임금연대·고용연대의 기본일뿐더러, 지역에서 노동시장의 표준을 확립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동시에 조직률의 확대와 더불어 높아지는 노동자계급의 단결은 민주노총 운동의 계급적 목표, 즉 체제에 맞서는 노동자운동의 재건, 간접고용 규제 강화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노동시장 유연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궁극적 승리를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주35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어떻게 볼 것인가?

민주노총 현장토론안에 전략투쟁 의제로 주 35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이하, 법정노동시간 단축안)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숙고되지 않은 주장이다. 오히려 이 주장은 구조조정에 맞서는 투쟁, 재벌에 책임을 묻기 위한 투쟁, 노동법 개정 투쟁을 교란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 때문에 시급한 과제들을 제쳐놓으면 안 된다.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또는 나누기)은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검증된 바 없는 주장이다. 오히려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대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은 변형근로(유연근무)제 도입-확산과 맞바뀌지는 식으로 도입된다.

설령 그러한 전제 없이 법정노동시간이 단축된다 하더라도 이미 한국사회에는 유연근무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어, 노조 조직률이 낮은 상황에서 법정노동시간 단축은 유연근무를 확산시키는 토양을 제공할 수 있다. 교대제 개편, 상시야간근로제, 시간제 근로제, 대체 휴무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해 노동시간 밀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주들의 최대 관심사인데, 자본가들은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계기로 삼는다. 법정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이 무관했던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더구나 이렇게 유연근무제가 확대 도입되면 사업장 내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대가 달라지고, 노동시간 분절화로 인해 노동자의 탈조직화가 촉진되기도 한다.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인 임금인상마저 곤란해져 중국에는 임금인상 역제의 효과마저 나타날 수도 있다. 주35시간제를 도입한 프랑스는 2000년에 이미 이런 상황을 경험했다.

한국은 원하청 체제가 구조화되어 있고, 원하청 간 임금격차와 고용격차가 심각하다. 이런 구조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격차의 확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더 높다. 시간당 임금이 낮은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하청노동자들에게로 노동시간 단축이 확산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작 우리나라 장시간 근로 관행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정노동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 적용 예외 특례업종, 연장근로시간 최대허용기준(12+16) 등에 대해 정부는 양보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이를 계기로 다른 제도를 개악하려 하고 있다.

노동시간을 실제로 단축하기 위해서는 초과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 법정최저임금-산별최저임금 인상 등 저임금 장시간 노동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연대임금 투쟁도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주35시간 법정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재론되어야 한다.

재벌체제에 맞서는 민주노총

1. 재벌 중심 성장 체제의 모순

외환위기와 재벌

1997~98년 경제위기는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중화학공업 정책을 계기로 고도성장할 수 있었던 재벌이 더 이상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선도하기 어려움을 보여주었다. 위기는 1986~87년 정점을 찍은 자본수익률의 하락 추세 속에서 발생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빅딜'을 통해 재벌들의 과잉자본을 처리하고, 재벌들은 자동차, 전기전자, 금융·유통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을 시도했다. 동시에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찾아냈다.

하지만 재벌의 구조조정이 한국 자본주의의 수익성과 생산성을 개선시키는 계기가 되지는 않았다. 오히려 순환출자구조를 확산시켜 재벌 가문의 경영 지배권을 안정화시켰다. 재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기 위해 발행된 유상증자분을 계열사들이 떠안았고, 2~3대에 걸친 경영세습 과정에서 재벌들은 '해외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순환출자구조를 더욱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서 2% 내외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 지배권을 유지했다.

강화된 재벌체제

수출 재벌 중심의 성장전략도 도리어 강화되었다. 김대중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모두 원화가치에 대한 평가절하 정책을 유지하면서 수출 재벌에게로 경제력을 집중시켰다. 또 민영화나 서비스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대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했다. 나아가 적극적인 노동 유연화 정책으로 재벌들이 저임금·비정규직으로 노동력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벌들은 기술혁신과 숙련을 통한 성장보다는 독과점과 비용 절감, 특히 원하청 구조를 매개한 노동비용 절감에 의존해 성장했다.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재벌들은 한국사회의 부를 독식하는 방법이었다. 또한, 한편으로는 그룹 전체에 대한 경영권 및 지배력을 담보하기 위해 일정한 현금 보유고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식소유자-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물 투자보다는 금융적 투자에 집중했다. 그렇게 해서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 5대 재벌은 성장하지만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은 반대로 하락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상위 1%의 소득은 확대되지만 하위 50% 소득은 정체되거나 심지어 하락하는 소득불평등도 본질적으로는 여기에서 비롯한다.

재벌들의 초과착취, 기민한 생산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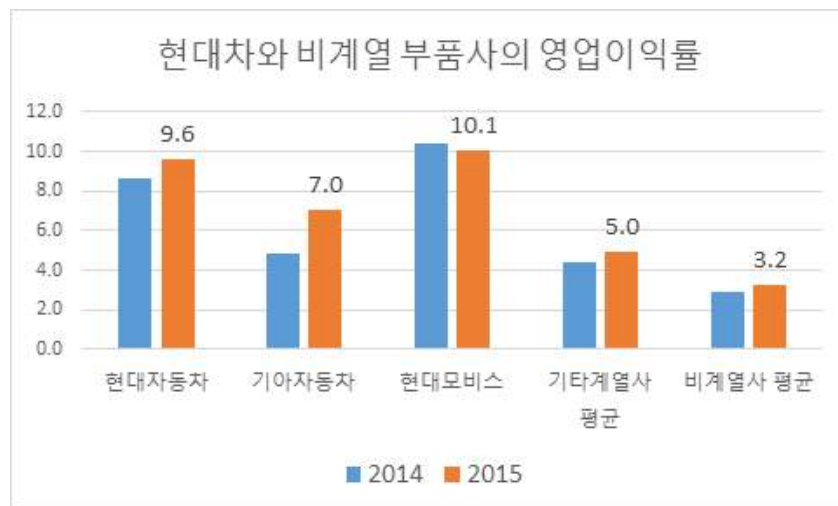
현대차와 삼성전자의 기민한 생산체제

재벌들은 어떻게 생산기술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해 부를 축적했을까?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가 IMF 경제위기 후에 어떻게 굴지의 세계적 대기업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자.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는 IMF 구조조정 이후 조직 관리 비용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방식을 모색했다. 재벌의 기업지배력을 이용해 하청업체들을 수직적으로 하청계열화하는 것으로, 재벌을 정점으로 3~4차 하청까지 생산·공급사슬을 구축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시장에서도 협력업체들과 함께 신속하고 유연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생산 및 부품 공급 과정은 물론 인사·노무관리까지 동기화시켜, 비용 절감과 함께 '기민한 생산체제'를 이룩한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려면, 생산관리 및 엔지니어링 기술과 정보통신기술, 운송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해당 산업에서 저비용 경쟁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민한 생산체제에 걸맞은, 근속과 연공급 임금체계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노동력 공급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바로 간접고용을 정점으로 하는 유연한 노동시장 말이다.

더불어 현대자동차 및 삼성전자는 기업지배력을 이용해 이익을 집중시킨다. 최종 완성사 및 핵심 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은 10%선으로 고정시키고, 기타 계열사 및 비계열사의 영업이익률을 낮게 조정함으로써 이익을 집중시키는 것이다.



<출처 : 산업연구원, 「자동차산업의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전제」, 연합뉴스, 2016.8.15.>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매우 악랄한 노동착취 체제이다. 첫째, 자동차 부품회사의 인건비 및 생산·기술 투자비를 둘러싼 지불능력을 열악하게 만들어 저임금 임시일용직 고용을 조장한다. 또 노무관리도 기민

한 생산체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폭력적인 형태를 띠게 한다. 둘째, 자동차 부품회사의 반노조정책을 조장한다. 특히 비계열사 부품회사 경영진에게는 노조의 통제에 사활을 걸도록 한다. 노조가 만들어지면 지불능력도 문제이지만 원청사가 원하는 타이밍에 신속·유연하게 납품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사이 비계열 자동차 부품사 사장들에게서 '노조는 암 덩어리다'라는 반노조 발언이 속출하거나, 금속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비계열 자동차부품사 지회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자행되고, 현대자동차로부터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요컨대 기민한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노동자들에 대한 초과착취를 실현하고, 비계열사 부품회사 경영진을 앞세워 자동차산업에서 노동조합의 씨를 말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발레오만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최근 유성, 갑을오토텍 지회에 대한 사업주들의 탄압은 금속노조를 주변에서부터 고사시키겠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노조 탄압이자 길들이기 수단이다. 이것이 최근 유성지회, 갑을오토텍에 대한 노조 탄압의 본질이다.

2. 재벌을 위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복되는 손실 전가

장기침체가 현실화되자 노동자의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정부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위시해서,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을 운운하며 사용자들에게 불리한 단체협약이 맺어지면 시정명령을 하겠다고 한다. 건설노조에 대해서는 아예 '공갈·협박죄'를 적용해 노동권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기업 회생 과정에 금융채권단은 노골적으로 관여해 자신의 손실을 막아내고, 최고경영자도 법정관리인을 통해 경영권을 방어하는데, 노동자들은 어떠한 권한도 인정받지 못한다.

지난 6월 발표된 정부는 조선3사와 현대상선 등 대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국민 세금 12조 원을 쓰겠다고 발표했다. 반면 임시·일용직이 다수인 조선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안전장치도 제공하지 않았다. 조선업·해운업 위기는 거둬진 경고를 무시한 정부와 재벌의 과오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말이다.

현대중공업 분사, 삼성중공업의 인원 감축, 대우조선해양의 특수선 산업 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보여주듯, 채권단의 손실을 메우는 절차가 진행되는 한편에서 노동자들은 이번에도 또 정리해고와 계약해지의 수용을 강요받고 있다. 노동자에게만 손실을 전가하는 구조조정이 반복되는 것이다.

민영화의 재추진

뿐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재벌들에게 새로운 먹잇감이 될 에너지와 철도 민영화를 추진 중이다. 6월에 전력 판매와 가스 도입을 재벌에게 허용하고 에너지 공기업을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을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으로 내놓았다. 멀게는 2003년, 가깝게는 2013~14년 노동조합과 국민들이 함께 싸워 막아

낸 전력·가스 민영화를 재추진하는 것이다. 철도 민영화도 재추진된다. 국가철도망 확충에 2025년까지 최대 19.8조원의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이 그것이다. 민자사업 대상이 경부고속선, 중앙선, 수서광주선, 남부내륙선, 춘천속초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등 전국을 망라한다.

철도와 에너지 모두 '민간 개방' '민자 유치' '서비스 다각화'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재벌에게 핵심적인 공공서비스 사업을 내주겠다는 내용이다. 재벌에게 특혜가 돌아가겠지만, 노동자에게는 더 딱딱하고 안전하지 못한 일터로, 국민들에게는 더 높은 요금과 공공성 박탈로 이어질 것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도,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도, 노동자들은 양보하고 국민들은 재권단과 재벌들의 주머니를 채워줬다. 이번에는 여기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재벌의 부채를 지탱해 주고 손실을 메워주는 악순환을 중단시키고, 재벌만 배불리는 민영화를 끝내야 한다.

3. 반재벌 투쟁, 노조답게 하자

시장정상화와 경제민주화를 넘어

이런 현실을 보면, 반재벌 투쟁은 원하청 공정거래, 이익공유제 등의 '시장 정상화' 정책으로 환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벌체제의 모순은 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주주의 권리를 높인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익공유제나 주주권리 강화가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 착취를 더 조장할 수도 있다. 또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제도적 해법(경제민주화)도 필요하지만 그것에 그쳐서도 안 된다. 노동조합운동의 위치에서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방어하고 단결을 높이는 방안이 더 중요하다.

노동자계급의 이해 방어

임금과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노동조합운동이 재벌들의 초과착취를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벌의 다단계 하청에 고용된 공단 노동자, 공급 및 운송을 담당한 운수·유통 노동자, 대형마트나 백화점의 판매 노동자, 제품 유지보수 및 AS 역할을 하고 있는 기술서비스직 노동자 등, 재벌의 공급사슬에 존재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시키는 활동이 바로 그것이다.

재벌에 맞서는 노동조합운동은 재벌체제의 후진성과 야만성을 드러내는 역할도 한다. 파견노동자들을 실명시킨 삼성전자 및 LG전자 납품업체들의 메탄올 사용 문제, 불합리한 임금·노동조건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에어컨 수리를 하다 추락사한 삼성전자의 기술서비스직 문제, 가학적 노무관리와 노조탄압에 희생된 유성지회의 노동자나 삼성중공업·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 이들의 현실을 알리는 일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왔다. 반면 제대로 된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지금도 재벌체제에서 파열된 아우성이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못하고 있다.

원하청 공동투쟁

나아가 제벌체제에 맞서기 위해서는 원하청 노동자의 공동투쟁과 연대가 핵심적이다. 그래야 임금격차가 좁혀지고, 재벌들의 초과착취를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업종별로든, 직종별로든, 산업별로든 재벌들을 교섭 자리에 앉히지 않고서는 연대임금, 연대고용은 실현되지 않는다. 재벌과의 중앙교섭, 집단교섭은 필수적이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집단적으로 개선하려면 원청과의 교섭은 필수다. 상시·생명·안전 업무에서의 직접고용을 위해서도 원청과의 교섭은 필요하다. 이것은 글로벌 공급사슬의 정점에 있는 초국적 대기업에게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국제 노동운동의 흐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다.

투쟁의 모색들

초기업적 교섭은 재벌에 맞선 노동조합운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교두보로서 의미를 가진다. 그런 점에서 2016년 금속노조의 그룹사 교섭 투쟁은 재벌들을 상대로 하는 중앙교섭·집단교섭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사하는 바가 있다. 하지만 그룹사 교섭 투쟁이 자동차 부품사로 확장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대차그룹의 기만한 생산관리(또한 노무관리)의 뒷에 갇힐 수 있는 만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계획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건설노조는 검경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원청을 상대로 하는 (집단)교섭의 필요성을 조직 내에 확산시켰고, 산재 사고 및 위험 업무에 대한 원청의 사회적 책임을 공론화시켰다. 기술서비스직 노동자들 역시 원청을 상대로 한 공동투쟁을 전개해왔다. 구의역 사고를 계기로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은 상시·생명·안전업무의 외주화 금지, 간접고용 규제를 사회화시켰다. 이러한 노력들에 기반을 두어 간접고용에 대한 규제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투쟁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조직화의 중요성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이 현실화되려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조직화 사업이다. 비정규직 조직화나 중소기업 사업장 조직화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보다는 ‘재벌체제에 맞설 수 있는, 재벌을 실질적인 교섭 자리에 끌어낼 수 있는 조직화’와 같은 정치적인 목표가 합의될 필요가 있다. 사실 재벌에 맞서는 조직화는 산별이나 지역본부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다. 전국적인 수준에서 공급사슬이 분석되어야 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략조직화 사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계획되어야 한다.

재벌과의 원청·산별·집단 교섭, 직접 고용 쟁취 및 간접 고용 규제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철도·에너지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 그리고 재벌체제에 맞서기 위한 노조 가입 캠페인의 전면화. 2017년, 민주노총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한 것은 조직 형식이 아니라 운동

: 산별노조·지역본부 조직 강화 문제에 대하여

1. 산별노조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논의의 출발점

민주노총은 '산별운동과 지역본부 강화'를 위한 과제로 조직개편 방안과 경로를 제안하고 있다. 물론 중요한 논의이다. 하지만 지금 민주노총에게는 '왜 산별노조인가' 혹은 '어떤 지역 노조운동인가'부터 논의해야 할 때가 아닌가.

민주노총이 한국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 특히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고자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 혹은 지역본부는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적합한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강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각급 조직을 강화하자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민주노총 정책대의원회 현장토론안은 이러한 목표를 너무 자명한 것으로 전제하고 논의를 시작한다. 그러나 그 목표에 대한 민주노총 내의 합의는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에 대한 논의 이전에 한국 노조운동의 현실에 대한 비판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이후 비정규직 확대, 노동시장 분할(격차 확대)이 진행되었으나, 민주노총은 여전히 대기업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다. 또 민주노총의 사업도 주로 이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규모 투쟁에 '동원'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한 논의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데 정작 전체 노동시장은 중소·영세·비정규직 부문이 압도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민주노총(산하 산별노조)은 이러한 전체 노동자 구성과 크게 괴리되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노총의 운동 과제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반적 변화해야 하는 것과 함께, 중소·영세·비정규직 노동자를 조직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산별노조 강화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의 문제다.

조직개편 추진 로드맵

민주노총이 산별노조 관련 실행사업으로 제안하고 있는 '조직개편 추진 로드맵'은 산별 간 통합과 산별 노조 운동의 내용, 제도에 대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이 안건을 논의하려는 목표가 산별 간

통합(정비)인지, 산별노조 운동 방향에 대한 것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전자(산별 간 통합)라면, 현장토론 안에서 제안된 것처럼 민주노총을 3~4개의 대산별(연맹)로 재편하자는 방향이 적절한지에 명확한 검토가 진행되어야한다. 인위적인 통합이 가능할지, 조직운영에 효율적일지도 의문이지만, 이렇게 할 경우 민주노총의 위상은 상당히 약화되고 대산별을 중심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

후자(산별운동 방향)라면 기존의 산별노조들이 해온 운동을 돌아보는 평가에서 출발해야한다. 앞서 제안한 것처럼 민주노총과 산별노조의 가장 큰 한계가 노동자 계급의 구성과 괴리된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조직확대(전략조직사업), 투쟁과제(최저임금 투쟁 등 미조직노동자를 포괄하는 투쟁과제)와 연계하여 제안되어야한다. 그런데 현장토론안에서 제안하는 내용은 주로 산별교섭에 대한 법제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물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이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지만, 법적·제도적 해결로 계급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는 의문이다.

오히려 한국 노동자운동은 법적·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한 교섭구조를 단결 투쟁을 통해 실현해온 경험이 있다. 교육청을 사용자로 정리시킨 학교비정규직, 노조법 외부에서 노동조합을 건설한 화물연대, 공동투쟁으로 초기업교섭을 실현한 대학 청소용역 노동자(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등. 최근 금속노조의 대재벌 그룹사 공동투쟁, 공공운수노조의 공공기관 교섭권 집중 공동파업 투쟁과 같이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재벌-정부에 대한 투쟁이 갖는 시사점을 반영할 필요도 있다. 수년간 우리 대중운동의 경험이 반영되어야한다.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산별노조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심각한 분할과 양극화를 해소하고, 이를 위해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임금인상과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시장의 분할·양극화는 자본의 전략만이 아니라 기업별노조·기업별교섭 체제에서 내부 노동시장의 임금 극대화과 기업 내 고용안정만을 추구해온 노동조합 운동에도 책임이 있다.

산별노조 건설 강화는 이러한 현실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하자. 노동시장의 분할·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정규직-비정규직이 공동의 요구를 쟁취하고 격차를 축소하며 초기업 임금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정규직-비정규직을 포괄하는 임단협 교섭-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의 임금인상·고용안정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교섭-투쟁과 함께 이들 노동자가 주체로서 투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 조직화에 적합한 형태로 노동조합 형태를 혁신해야하며, 따라서 산별노조-지역본부 과제가 조직 확대(전략조직화)와 분리될 수 없다.

조직형태와 구획의 문제는 이러한 운동과제 실현을 위한 공동투쟁에 적합한 방식이면 충분하다. 지역본부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의미에서 조직형식적인 권한-재정-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만 진단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운동 목표에 따라 산별과 구별되는 지역본부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강화하기 위한 논의로 진행해야한다. 즉, '무엇을 하기 위해 지역본부를 강화하려하는가?'에 대한 답변이 제시되어야한다.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제까지 산별노조 건설은 노사관계·노동시장의 변화, 즉 미조직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자의 현실을 바꾸어내기 위한 실천 운동이었다. 물론 기존 노조 조직의 내부적인 과제(조직적 단결과 투쟁력 확보, 효율적 정비 등)가 산별노조 건설의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민주노총이 그것만 부각해서는 안 된다. 산별노조와 지역본부는 전체 '노동자계급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기반, 토대이기 때문이다.

2. 지역의 총연맹으로서의 지역본부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통일적 운동 전략의 부족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본부는 민주노총 창립 이래 민주노총(총연맹)의 지역 집행단 위라는 규약상의 규정 이외에 그 역할과 위상이 명확히 규정되어 온 바가 없다. 민주노총 창립 이후 20년 동안 민주노총 내외부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특히 산별노조 운동의 건설-확대-침체 등의 조건에 따라 지역본부에 부여되는 역할은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추진력 있게 진행되던 시기에 지역본부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지역운동, 지역정치운동 차원의 역할이 많이 부여되었다. 반면, 산별노조 운동이 침체되어 있는 조건 속에서는 현장에 대한 지원과 개입력 강화, 산별지역조직에 대한 지도·지원 강화 등이 지역본부에 주문되어 왔다.

그런데 민주노총이라는 총노동 내셔널센터의 지역조직으로서 지역본부의 고유한 운동적 과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직 내의 심도 깊은 논의와 공식적 합의가 거의 없었다. 그로 인해 현재 16개 지역본부의 운동 양태, 주요 운동과제는 지역적 조건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민주노총 전체 운동 방향 속에서의 통일적 운동 전략이 부재한 상태다.

한편, 노동조합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교섭·투쟁의 권한이 산별노조에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내에서 지역본부 운동의 과소대표, 산별지역조직에 대한 지도·집행력의 한계, 인력과 재정 등 자원의 부족 문제는 지역본부 운동주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산별노조 운동을 상대화 하거나 그에 대한 반정립 경향 등도 지역본부 운동에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역본부 대의원 확대를 포함하는 의결구조에서의 지역본부 대표성 확대와 같은 조직·형식적 측면의 접근이나 인력과 재정 확대 중심의 접근으로는 근본적으로 풀릴 문제가 아니다. 노동조합으로서, 지역본부 운동이 왜 중요하며,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재정립이 우선적 과제이다.

지역본부운동 재정립을 위한 세 가지 과제

첫째, 총연맹의 투쟁과 사업을 단순 집행하는 실무기구가 아니라, 지역의 작은 총연맹으로 지역본부 위상을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지역본부 운동양태가 다양하게 분화되면서, 각 지역본부들 마다 정치운동,

현장 및 산별 투쟁지원, 미조직노동자 조직사업, 지자체를 상대로 한 정책·제도적 개입 사업 등의 지역본부가 수행해야 할 여러 운동과제 중 특정 영역에만 집중하는 운동양태가 고착화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70만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계급을 위한 조직이며, 따라서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개입, 한국사회에 대한 변혁을 지향하는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역본부도 소속 사업장 조합원만이 아니라, 지역의 전체 노동자, 지역 노동시장, 지역사회 전반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는 지역의 작은 총연맹, 민주노총의 지역 센터로서의 실질적인 자기 위상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민주노총 지역 센터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어떤 운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운동 전략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사업영역으로서의 정치사업, 미조직사업, 투쟁사업, 대지자체 사업이 아닌, 조직률 제고를 통한 지역에서의 계급대표성 확대 전략, 그 힘을 바탕으로 한 노동시장 개입전략, 지자체 교섭과 투쟁 전략 등 종합적인 운동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운동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 총연맹이 지역본부 운동을 통일적으로 지도·지원할 수 있는 사업영역과 체계의 구축, 산별노조 지역조직에 대한 지도력·관장력을 높일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안, 취약한 인력과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한 조직적 합의와 실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본부 운동 전략은 지역본부의 고민과 토론만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 지역본부의 고민과 합의를 모아 내고, 산별노조가 함께 결의해야 할 과제를 정식화하는 가운데, 전체 민주노총 운동 방향 속에서 앞으로의 지역본부 운동 전략에 대한 토론과 결의가 필요하다. 이번 민주노총 정책대의원 대회는 이와 같은 조직적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찰과 반성, 혁신이 정치세력화 논의의 출발

1. 제대로 된 방향설정 필요

정책대의원대회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민주노총의 정치 전략이다. 민주노총은 이를 “한국사회의 진보변혁적 재편의 전망 제시 … 민주노총이 주도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치면서 안의 내용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는 지난 시기 진보정당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해 민주노총이 정치 영역에서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갈수록 진보정당 운동이 악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최근의 몇 차례 선거에서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의 힘과 의지를 모아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개로 나뉜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수준의 방침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선거 시기 투표나 지지를 요청받을 뿐 현장과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에 각종 노동자 투쟁에 있어서 당장의 정치적 대변이나 해결을 위해 실용적으로 야당을 활용하거나 의존하는 경향도 생겨났다. 따라서 이러한 현재의 상황을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대중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1997년 국민승리21부터 시작해서 근 20년에 이르는 정치세력화의 역사가 오늘날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이유를 분명하게 분석하고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방향이 대중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세력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올바르게 성찰하고 혁신하여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무엇을 반성하고 성찰할 것인가

민주노총 정치전략 안에서는 “이전 시기의 ‘패권적 당 운영’, ‘상층 중심과 현장 대상화’, ‘의회주의와 대리주의’ 등 오류와 편향에 대한 성찰과 반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같이 만만치 않은 평가 과제들이고 철저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더해 노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예컨대 2008년 민주노동당 분열의 주된 요인의 하나는 북한에 대한 입장 차이로서, 북핵 문제 등 변화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입장의 간극이 큰 것이었다. 또한 당 분열 이후 민주노동당이 사회주의 지향의 강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로 대체하여 국민참여당과 합당한 문제도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비례경선 부정 문제와 폭력 사태도 커다란 파장을 낳았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진지하게 공식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여러 세력들이 각자의 정당을 꾸리고 있는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성찰과 반성이 논의의 출발이어야 할 것이다.

3. 어떠한 이념과 노선을 추구할 것인가

새로운 정치세력화라는 것은 무엇보다 운동의 이념과 노선을 대중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자본주의 경제위기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서 새로운 대안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지향이 필요하다. 즉 자본주의 체제 극복,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 비핵화와 군비축소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평화주의, 성차별과 싸우고 여성해방을 지향하는 여성주의, 생태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생태주의, 국적과 인종을 넘어 연대하는 국제주의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치세력화 논의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없다. 단병호 민주노총 지도위원도 최근 <노동과 세계> 기고에서 “정치일정에 대응한 투쟁을 통해 진보정치를 재편한다는 방향은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진보정치세력을 재편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낸 바 있다. 단결의 당위와 정치일정 대응에 앞서 이러한 이념과 노선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노동운동 혁신과 활성화가 바탕이 되어야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조직률도 허약하고 계급대표성도 취약하며 내부격차도 크다. 조직 내 갈등적 사안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역량도 충분치 않다. 정권과 자본의 폭압적인 노동탄압 역시 어느 때보다 심하다. 노동운동이 튼튼해야 정치세력화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인데 현재의 노동운동 역량이 확대 추세라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보다 노동운동 혁신과 활성화, 조직화 확대가 중요하고 이것이 정치세력화의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신뢰 구축 없이 전진하기 어렵다

새로운 정치세력화가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운동 세력들 간의 연대와 신뢰 구축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지난 총선에서 각 세력이 각개약진한 상황만 보더라도 이것이 현재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노총 내에 여러 세력들이 각기 다른 진보정당운동과 연계되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치세력화 추진은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끊임없는 토론과 차이의 조정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당 건설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 한다면 갈등만 키울 것이다.

새로운 정치세력화 논의는 과거와 현재의 정치운동을 총괄적으로 평가, 진단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중요한 논의이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을 지금 결정하냐 마냐를 넘어 성찰과 반성, 이념과 노선 논의, 노동운동 혁신과 강화, 연대와 신뢰구축 등의 과제들을 신중하게 토론하고 민주노총 운동을 혁신하는 과제로 만들어가야 한다.